

꼭 알아야 할

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신규 모델 제시

● 협업행정의 중요성

- 복잡화,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 - 복잡한 사회적 난제가 기반이 되는 최근의 행정수요 파악의 필요성 대두
 - 사회적 난제의 범위 및 속성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노력 필요
- 공공·민간분야 주체 간 협업의 필요성 대두
 -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시대에 필요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필요
 - 협업행정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자체의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

● 협업행정 개념 재정립

- 협업행정의 참여주체 범위에 대한 이론(異論) 존재
 - 공공분야 주체에 한정: 민간을 제외한 공공분야의 부서, 기관들의 상호작용으로 범위를 제한
 - 공공·민간분야 주체 포함: 민간이 참여한 협력방식을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포함
- 최근 행정에서의 민관협력 및 민간참여 중요도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
 - 협업행정과 민관협력 간 구분이 모호한 최근의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에 공공, 민간분야 주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
 - 실제로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사업 중 민간 주체 참여 사례의 비중이 공공분야 주체만이 참여한 경우보다 높음을 확인

〈표 1〉 참여주체에 따른 협업행정 공모 사례 분류 결과

구분		2018년 사례 수(%)	2019년 사례 수(%)	계
참여유형	공공부문	5(12.2)	10(33.3)	15
	민간참여	36(87.8)	20(66.7)	56
	합계	41(100)	30(100)	71

자료 : 2018, 2019년도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사업을 연구자가 분석

주 : 공공부문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을 포함

- 협업행정은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, 재원,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
- 협업행정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사례들의 서비스 분야 및 속성 등을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협업행정 모델 제시 필요
 - 기존의 협업행정 모델은 협업의 주체, 내용 및 효과는 파악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요인들의 고려가 미흡
 -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협업행정 사례 기획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, 내용, 속성, 기대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협업행정 모델 제시 필요

● 신규 협업행정 모델 개발 제안

- 협업행정 모델의 고려기준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
 - (참여 주체) 공공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범위 이해 필요
 - (분야) 협업행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현안, 목표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
 - (과학기술) 과학기술의 적용은 특정 협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
 - (정책대상) 대부분의 협업행정 사례의 정책대상은 외부 수요자이지만, 특정 사례는 내부고객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추구
 - (자원공유) 협업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참여주체들 간 예산, 인력, 정보 등의 자원 공유 필요¹⁾
 - (지속가능성) 협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(예. 조례 제/개정), 운영기관 설립(예. 협동조합, 법인),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이 필요
- 신규 협업행정 모델은 사회혁신 협업모델과 행정혁신 협업모델로 구분
 - 사회혁신 협업모델의 특징
 - 정책대상은 외부고객이며, 참여주체는 공공 및 민간 모두를 포함
 -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며,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의 적용에 적절
 -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특징
 - 정책대상은 내부고객이며, 참여주체는 제한적이지는 않으나 공공분야 주체 중심
 - 단기적으로 신속한 업무개선을 위한 협업으로, 특히 정부부처, 부서, 지자체 간 자원의 공유가 필요한 분야의 적용에 적절

〈표 2〉 신규 협업행정 모델

요인	유형	
	사회혁신 협업모델	행정혁신 협업모델
특징	정책대상	시민(외부고객)
	참여주체	공공+민간
	기간	중장기
	서비스분야	제한없음 ※ 외부의 전문기술·지식활용 관련 분야 적합
협업 시 고려사항	속성	하드웨어/소프트웨어 사업 모두 적합 –
	자원공유	민관 협업 시 상대방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 필요
	과학기술 적용/가능성	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또는 독자 시스템 구축
	지속가능성	전담부서/인력 확보, 조합 등 기관 설립, 조례 정비 등

1) 원만한 협업체계 구축: 참여 주체별 재정, 인력, 기술 등과 관련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유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체 간 불균형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계관계 해소 필요

▶ 참고자료 : 이재용·김대욱(2020), 「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[원문보기](#)

▶ 내용문의 : 이재용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51, jlee@krila.re.kr)

▶ 지난호 :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개선방향(박현욱 부연구위원)

[원문보기](#)



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